



꼬리에 꼬리를 무는 100가지 질문과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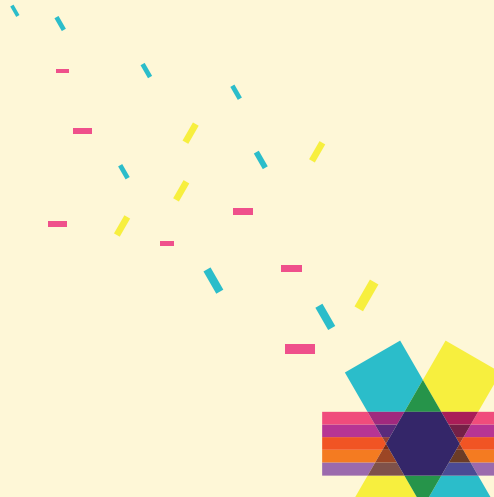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랄하게 묻고

정부가 진솔하게 답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는
100가지 질문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100가지 질문과 답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랄하게 묻고

정부가
진솔하게 답하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100가지 질문과 답변

| | |
|------------------------------|----|
| 1.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 5 |
| • 얼마 남는다고 카드수수료? | 6 |
| • 세금 부담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 9 |
| • 장사 좀 된다 싶으면 임대료가 걱정이네요 | 12 |
| • 오르는 최저임금 때문에 막막해요 | 15 |
| •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사회안전망이 필요해요 | 18 |
| • 사업자금 대출 좀 더 안 되나요? | 21 |
| 2.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다면... | 25 |
| •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진출 무서워요 | 26 |
| • 기맹본부와 상생하며 발전하면 좋겠어요 | 29 |
| • 배달앱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 34 |
| • 라벨갈이, 불법 아닌가요? | 35 |
| 3. 나도 장사해서 성공하고 싶은데... | 37 |
| • 혁신 노력, 정부도 응원해주세요 | 38 |
| •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나요? | 40 |
| • 소상공인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 42 |
| •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뭐가 있죠? | 44 |
| • 창업도 어렵고 재기도 어렵네요 | 47 |
|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 52 |
| 4.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말 못 할 애로... | 58 |

01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01 대형마트는 카드수수료를 실질적으로 1% 수준 밖에 안낸다는데 소상공인은 2% 넘게 내고 있어요. 개선이 되었나요?

-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대범위 확대 : 영세(2→3억원, 0.8%), 중소(3→5억원, 1.3%)
- 우대범위 신설 : 5~10억원(2.05→1.4%), 10~30억원(2.21→1.6%)

|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 | 기존 | 개선안 | 인하폭 | |
|------------------|-------------|---------|---------|------|----------|
| 신용 | 우대 가맹점 | 5~10억원 | 약 2.05% | 1.4% | 약 0.65%p |
| | (우대수수료를 신설) | 10~30억원 | 약 2.21% | 1.6% | 약 0.61%p |
| 체크 | 우대 가맹점 | 5~10억원 | 약 1.56% | 1.1% | 약 0.46%p |
| | (우대수수료를 신설) | 10~30억원 | 약 1.58% | 1.3% | 약 0.28%p |

- 수수료 상한 인하(2.5→2.3%), 뱅크수수료 개선(정액 → 정률제) 등

☎ 금융위원회 02-2100-2500

02 온라인쇼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데요.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온라인 판매업자 수수료 인하 : 3.0→1.8%~2.3%
- 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 1.5%→1.0%

* PG(Payment Gateway)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영세업체를 대신해 카드사와 대포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는 업체

☎ 금융위원회 02-2100-2500

03 카드수수료가 낮아졌다는데 잘 실감이 나지 않네요. 실제로 낮아진 거 맞나요?

- 우대수수료 구간 신설(5~30억원), 개인택시 및 온라인판매업자 수수료 인하 조치가 '19년부터 시행되어 조만간 효과가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 또한, 카드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우대 공제율 적용기간이 연장되어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은 더욱 인하됩니다.
- * 세액공제 한도 확대(500→1,000만원) 및 우대공제율(1.3%) 적용기간 연장('18→'20년)
-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로페이¹를 도입하고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 * 연매출 8억원 이하(소상공인의 91.7%)는 0%, 8~12억원(4.3%)은 0.3%, 12억원 이상(4.0%)은 0.5%를 적용, 소상공인 이외의 점포는 민간 자율로 결정

☎ 제로페이 콜센터 1670-0582

04 아직 제로페이 가맹점이 적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 현재 시범 시행 단계로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으로 가맹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 시범상가 지정시·도별 전통시장·상점가·대학가 등), 가입방법 홍보 등 추진
- 소득공제(40%) 혜택 외에도,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각종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활용 유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 업종단체와 협업으로 포인트 지급 및 할인행사 등 공동마케팅 행사 추진

☎ 제로페이 콜센터 1670-0582

05 제로페이 말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 가맹점은 등록 신청을 하고, 소비자는 앱을 실행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가맹점** 등록신청은 제로페이 홈페이지(zeropay.or.kr)나 지방 중기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된 가맹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소비자**는 제로페이 별도앱이 아닌 기존 은행 및 간편결제사 앱을 이용하거나 신규로 설치하여 이용**

* 뱅크페이(은행공동), 투유뱅크(경남은행), 리브(국민은행), i-ONE뱅크(기업은행), NH앱캐시(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아이엠뱅크(대구은행), 쌤뱅크(부산은행), 파트너뱅크(수협은행), 신한SOL(신한은행), 원터치 개인(우리은행), 케이뱅크(케이뱅크), 네이버페이(네이버), 페이코(엔에이치엔페이코), 하나멤버스(하나카드), 머니트리(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 설치된 앱을 실행해 매장QR 코드 촬영 후, 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거나, QR코드(바코드)를 생성하여 매장의 POS 등을 이용하여 결제

☎ 제로페이 콜센터 1670-0582

06 경기도 안 좋은데 세금부담이라도 줄여주면 안되나요?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세금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높이고*,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5%p 확대('19년)
- *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대상 8/108→9/109로 상향

| | 〈 현행 공제한도 〉 | | | 〈 '19년말까지 특례 〉 | |
|-------|--------------|----------|-------------------|----------------|------|
| | 연매출액 | 기본한도 | 음식점업 특례 ('18년말까지) | 한도 | 음식점업 |
| 개인사업자 | 2억원 이하 | 매출액의 50% | 매출액의 60% | 55% | 65% |
| | 2~4억원 | | 55% | | 60% |
| | 4억원 초과 | | 40% | | 45% |
| 법인사업자 | '18년 말까지 35% | | | 40% |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연매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센터 044-215-2114 / 국세청 126

07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는 있는데, **성실히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이 없나요?

-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 (월세)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 주택월세액의 10% 세액공제(75만원 한도, 기존에는 근로자에게만 적용)
- (의료비·교육비)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기한연장('18년→'21년) 및 요건 완화*
- * '18년 성실사업자 요건완화(복식부기 신고→간편장부 신고 포함, 수입금액이 직전 3개년 평균의 90%→50% 이상, 계속사업 3년 이상→2년 이상)

☎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센터 044-215-2114 / 국세청 126

08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 자체가 낮아 생활이 힘들어요. 실제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은 없나요?

- 영세 자영업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ETC) 지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혜택 자영업자 : 57→115만가구, 지원규모 : 0,4→1.3조원)
- * (재산요건 완화) 가구당 1.4억원 미만→2억원 미만
(소득요건 완화) 1,300~2,500만원 미만→2,000~3,600만원 미만
(최대지원액 확대) 85~250만원→150~300만원

☎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센터 044-215-2114 / 국세청 126

09 정부에서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냥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매년 5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정기신청** : 5.1~5.31일
- 기한 후 신청* : 6.1~11.30일(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지원금액의 10%가 감액 지급됨
- 자영업자의 경우 아래의 세무상 절차 사전이행 필요
- * ① 직전년도 12.31일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②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또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 신고 완료, ③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국세청 126

10 힘들게 일해서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건물주가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책적으로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요?

- '18년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을 상한선을 당초 9%에서 5%로 인하였습니다.
- 또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19.4월 시행)

☎ 법무부 고객센터 02-2110-3000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1599-0001

11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데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 776곳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했습니다. ('19.4월 시행)

☎ 법무부 고객센터 02-2110-3000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1599-0001

12 상가임대차 관련 보호를 강화했다지만, 임대료가 높은 서울 처럼 아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임대차보호대상을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그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 임대차 보호대상 확대 : (중전) 60~70% → ('18) 90% → ('19.3월) 95%*
- *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6.1억원에서 30~50% 인상 전망
- '20년까지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모든 상가를 보호대상으로 할 계획

☎ 법무부 고객센터 02-2110-3000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1599-0001

13 임대료, 권리금 회수 등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19.4월)
-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에도 실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했습니다. ('19.4월 시행)
-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중위소득 125% 이하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577만원 이하)에 대하여 무료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대한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 상가보증금 등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제외)을 지원합니다.
- * 예) 상가보증금, 물품대금, 상가임대차,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상거래 관련 사건
- 한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14 임대차 계약기간 중간에 폐업하면 바로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폐업 또는 이전 등의 사유로 임차계약 만료 전 점포정리가 필요하나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애로를 겪는 업체를 위한 '임차소상 공인전용자금'을('19. 200억원, 업체당 1억원 한도) 신설할 예정입니다.('19.3월~)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15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상가**를 공공기관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 대표적으로 '희망상가'와 '공공상생상가'가 있습니다.
 -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일부를 소상공인 등에게 저가(주변시세의 80%)로 제공하는 '희망상가' 운영(LH 한국토지주택공사)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 주는 '공공상생상가' 공급 추진('19년말)
-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상생상가 사업자에게 사업비의 80%까지 연이를 1.5%로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16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18년에는 어떻게 버텼지만, '19년에도 10.9% 오른다니 참 막막하네요.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건가요?

- '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작년보다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액 확대(13→15만원)
 -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기준보수 상향 조정(190→210만원 이하)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17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직원들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아닌가요?

-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 : 기준보수를 상향 조정(190→210만원)하고, '18년 우대사항(5인 미만 90%, 10인 미만 80% 지원) 계속 적용
 - 건강보험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확대(50→60%)
 -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업주 실무담액의 50% 세액공제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18

'18년에 4대보험 가입시킨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이 없는 건가요?

- 가입 2년차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신규가입 후 3년간 유지됨
- * 예) '18.7월에 신규가입(5인미만)할 경우, '21.6월까지 90%까지 지원
- 건강보험 지원은 2년차 직원에 대해 30% 경감 적용
- 사업주 실무담액 세액공제(50%)는 가입일로부터 2년간 적용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사회보험료 지원 요약

| 지원분야 | 신규가입자 | 기존가입자 |
|---------------------|-------------------------------------------------|----------------------------------------------------------|
| 두루누리 (고용보험·국민연금) | • 5인 미만 90% 지원 • 5~10인 미만 80% 지원 | • 10인 미만 40% 지원 * '18년 신규가입자는 '19년에도 동일한 비율로 지원 |
| 건강보험 | • 5인 미만 60% 경감 • 5~30인 미만 50% 경감 | • '18년 가입자 30% 경감 |
| 세액공제 | • 신규가입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무담액의 50% 세액공제(가입일로부터 2년간) | |

19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소상공인인데, 우리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가 있나요?

- 최저임금 결정 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했습니다.(현 위원* 임기만료('21.5월) 후 추천 가능)
- * 기존 사용자위원(9명) 추천 : 대한상의(2), 중기중앙회(2), 경총(3), 무역협회(2)
-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1350

20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임기가 '21.5월까지인데, 그럼 소상공인의 의견은 2년이 지나야 반영될 수 있다는 건가요?

-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사용자측의 추천으로 **소상공인 대표** 2명이 참여 중이며,
- 이와 함께, '18.8월 확대 개편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측 대표로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 중으로 노동관련 이슈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1350

21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요?

- **고용보험** 가입요건과 해지요건을 완화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창업 후 1년 이내→5년 이내)
 - 체납 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3→6개월)
-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업종을 확대합니다.
 - ('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7개 제조업** → ('19) 도소매, 음식점, 기타개인서비스업 추가
 - *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택배원(퀵서비스업자 등), 예술인
 - ** 1차 금속, 금속 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향후, 가입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 추진('20~)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2 자영업자는 자기고용을 하는 근로자 성격도 있는데, 사업주가 50%를 지원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지원이 많이 약한 거 아닌가요?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18년부터 시행 중이며,
 - '19년에는 지원대상(기준보수 1등급→1~4등급), 지원비용(보험료의 30%→50%), 지원기간(2→3년)을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23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이외에, 다른 사회보험은 지원하는 제도가 아직 없나요?

- 네 아직 없습니다.
 - 그래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중기부, 복지부, 고용부) 연구용역(지원대상 기준 마련, 비용 추계 등)을 추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19)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24 무급으로 근로하는 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 현재 없는 상황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 등 친족(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산재해해보상보험법 국회 계류 중)

☎ 고용노동부 1350

25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이 당장 어렵다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폐업이나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노란 우산공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 '18년말 기준 140만명 가입 중, 23.6만명이 1.6조원의 공제금 수령
 - 공제금 보호 : 시중은행에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경우,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 혜택 :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 * (4천만원 이하) 5백만원 한도, (4천만원~1억원 이하) 3백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26

고용보험의 경우 재직자나 실업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지원 하는 제도가 있는데, 노란우산공제에는 그런 게 없나요?

- 가입자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취업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19.상)
- * 법무·세무 등 경영지식, 정부정책 활용 안내 등 역량 강화
- ** 중소기업 인식개선·취업상담 등 교육 후 업종별 조합 등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27

‘비울 때 우산 뺏기’식 행태 때문에 정작 힘들 때 대출받을 데가 없네요. 정책자금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 소상공인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18, 1.6→’19, 2조원)하고, -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1.8조원 공급할 계획입니다.(기업은행)
- * 은행간 단기기준금리(KORIBOR) 적용(2% 내외)
-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충을 위해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5조원 내외로 확대하고, - 은행권 사회공헌기금을 활용(500억원)하여 신·기보 신용보증 6천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19년 중 총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기업은행 1566-2566 / 금융위원회 02-2100-2500

28

정부에서 금융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신용등급이 낮으면 시중은행처럼 안 해주는 거 아닌가요?

- 저신용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신설(’19, 100억원)하여, 신용등급은 낮지만 발전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없이 사업성만을 평가하여 융자
- 중저신용등급(4~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 2천억원 신규 공급(기업은행)
- * 미래 발생 가능한 카드매출수익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카드 매출대금 입금액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

- 저신용층(7등급 이하) 대상 10% 중후반대 금리의 긴급 생계·
대환자금* 신설('19년 중 출시 예정, 1조원 수준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 (생계자금) 대부업 이용 전 대부업의 대체제로서 생계자금 지원
(대환자금) 대부업 이용 후 대환을 통해 이자부담 완화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기업은행 1566-2566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29

정부 정책자금은 통상 원금에 대해 균등분할상환제를 채택
하고 있어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일시적으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으면 연체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있는지요?

•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는 '19년부터 경영상황에 따라 월별 상환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고,

* 연간 상환금액만을 정하여 매달 원금 상환부담을 없애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상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소공인
특화자금'부터 도입)

- 아울러, '18년부터는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 기업의 자금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조기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
했습니다.

* '18년의 경우, 4,842억원(18.5만건)에 대한 조기상환 수수료 63억원 면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30

그간 연대보증 관행이 많이 축소되어 왔지만 시중은행에서
대출시 법인의 경우는 여전히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합니다. 정책금융기관부터 앞장서서 이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시 법인에 대해 적용되던 대표자 연대
보증을 전면 폐지했습니다.('18.5월, '18년 중 1,258개 업체 혜택)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18.4월부터 폐지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31

최근 경영상황이 안 좋아져서 당장 채무상황이 어려워질 것
으로 보이는데, 미리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히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설할 계획입니다.('19.하)

* (예시) 연체 우려가 있고, 일시적인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등

* 본격적인 채무조정(개인/프리워크아웃) 전 긴급구제를 위해 일정기간
(최대 1년) 상환유예 등 유동성 지원에 중점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 금융위원회 02-2100-2500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0년 전부터 **갚지 못한 채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통장도 못 만들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갚을 돈도 없고, 저는 언제까지나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하나요?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10년 내외의 장기 부실채권 ('17년말 8,800억원)을 '21년까지* 매각** 또는 자체소각할 예정입니다.

* 10년 이상 채권 3,154억원 '19년까지 정리, 5~10년 경과 채권 5,680억원 '21년까지 정리

**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또는 소각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02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다면...

33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출로 장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정부에서는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요?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영업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노력하겠습니다.

* 등록(입지)제한 가능지역 확대(전통시장+상점가 1km 이내),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월 2회 휴무), 상권영향평가 대상업종 확대 및 작성주체 변경,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력 제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34

유통법 개정안 좋긴 한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소용 없는 거 아닌가요?

- 법개정 전, **하위법령** 등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조치는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 지역경제, 고용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항목 세분화 등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기준·방법 보완

* 향후 일정(안) : 연구용역('18.11~'12)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19.상)

– 교통영향평가심의 강화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교통유발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와 분리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운영

* (현행)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중 교통전문가 1/4 참여) → (개선)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 교통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용역(~'19.4) →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19.하)

35

유통법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의 소형 유통점(H&B 스토어, 다이소 등) 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여 확장을 억제할 계획입니다.(상생협력법 계류 중)

– 사업조정 권고범위를 사업개시, 사업축소(생산품목·수량·시설)에서 '판매·마케팅 제한'까지 확대

* (현행 법률) 제조업 위주의 규정 → (개선) 유통·서비스업 등에도 적용

– '중소기업단체'로 제한된 사업조정 신청을, 단체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업종 1/3 이상 동시 신청 가능토록 개선(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 (현행) 중소기업단체만 신청원칙, 단체가 없는 경우 1/30이상 동의로 가능 → (개선) 중소기업단체만 신청원칙, 단체가 없거나 대표성 부족시 1/30이상 동의로 가능

* 사업조정제도 : 대기업의 진출로 해당 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36

대기업의 진출은 공간적으로만 막아서는 실효성이 약합니다.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품목 자체를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생계형 적합업종법 시행**(’18.12.13)에 따라,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19.하)하여 5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합니다.
-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확장할 수 없으며,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위반 매출의 5% 이내)
-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경쟁력을 높여 장기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업종별 경쟁력 진단*을 통해 공동사업 발굴·지원(’19. 25개)
- * 업종별 PM, 전문가, 연구계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업종 진단 및 과제 발굴·기획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37

생계형 적합업종법이 통과 되었다는데,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지정하나요?

- 소상공인단체의 신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검토 후 정부에 그 지정을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지정여부 및 사업제한 범위 등)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 신청(소상공인 단체) → 의견수렴·실태조사 후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동반위, 6개월)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중기부, 3개월) → 지정·공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38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가맹본부의 공급물품 가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못 받았습니다. 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 되도록, 차액가맹금(가맹본부의 유통마진)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19.1월)
- *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39

본부와의 계약조건 때문에 심야시간대에 적자가 나도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해야 했습니다.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더 풀어주면 안되나요?

- 편의점 등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을 완화하여 심야 영업에 따른 부담을 축소했습니다.

| 구분 | 기존 | 개선 |
|-----------|--------------------|-----------------|
| 심야영업시간대 | 5시간(오전 1시부터 오전 6시) | 6시간(0시부터 오전 6시) |
| 영업손실 발생기간 | 영업시간 단축요구 전 6개월 | 3개월 |

- 심야영업(0~6시)으로 직전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가맹 본부에 요청하면 영업시간 단축 허용
- *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거부할 시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능(시정조치, 과징금 등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40 본부 차원에서 **광고·판촉행사**를 추진할 때 비용을 분담 시키려면 **최소한 물어는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진행 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계류 중)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4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었는데 가맹수수료는 그대로입니다. 비용인상분을 가맹수수료 책정 시 감안해 줄 수 없나요?**

-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이 늘 경우 가맹수수료 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17.12월)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42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가맹본부가 위반해도 **보복이 두려워 사실상 신고는 못하는 게 현실 아닌가요?**

-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19.7월 시행)
- * 법률 위반으로 인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법적 다툼 이전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43 지방 소재 가맹점·대리점은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거리가 멀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조정절차 진행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큼니다. 지방에도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요?

- 지방 소재 가맹점·대리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광역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18.12월)
- 현재 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설치 준비 중이며,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해당지역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온라인, 우편, 방문)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44 가맹본부가 제 영업지역 내에 **대리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제 영업권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그간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동일 브랜드의 직영점, 가맹점 설치만 제한되었으나, 가맹점 영업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대리점이나 유사가맹점 설치도 금지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개정안 계류 중)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45

가맹본부와의 관계도 어렵지만, 다른 브랜드의 가맹점이 우리 가게 옆으로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근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이 승인되었습니다.(’18.12월)
- * 6개 편의점 본사(CJ,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 24) 소속 가맹점 38,000여 개 대상(전체 편의점의 96%)
-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및 상권특성 등을 고려한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인근 경쟁브랜드 등 상권정보 제공 확대
- * 서울시 : (현행) 서초구 100m, 나머지 구는 50m → 모두 100m로 확대 추진
- * 제주도 : (현행) 읍면동 소재지 50m, 나머지는 100m → 각 2배 확대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46

자율규약이면, 강제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점 기준 위반 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 *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될 경우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 발생
- 폐업 시 위약금 감면 사유(근접출점 등)를 표준 가맹계약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19.1월)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47

가맹관계에 대해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요? 서로 상생을 통해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매장이전 비용 지원,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 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등 혜택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48

배달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비싼 **수수료와 광고비** 때문에 힘들어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배달앱 광고비나 수수료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나, 가격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 협·단체가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는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통합 신고 창구'** 운영('19.3월)
- * 소상공인, 자영업자 협·단체와 O2O사업자로 구성된 '공정거래 협의체(가칭)' 운영
- ** 현행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활용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49

사실상 우리 소상공인도 배달앱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배달 앱과 소상공인이 사업 파트너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상생협력 사례*의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19.상. 공정거래 협의체에서 상생방안 모색)
- * (사례) 고객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O2O 사업자(배달의민족)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50

외국산 의류를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라벨갈이 때문에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정부는 대응방안이 있나요?

- 국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합동단속****등을 추진 중입니다.
- * 중기부, 산업부, 관세청, 서울시, 서울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간추진위원회
- ** 21개 업체 24,244점의 의류 등을 적발 하였고 17명을 형사입건 조치('18년)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51

서울의 일부 도매상인이나 소규모 제조업체에서는 라벨갈이가 **범죄행위인 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의류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동대문과 창신동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 * (형사처벌) 최대 5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행정제재) 최대 3억원의 과징금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52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불법 라벨갈이를 보면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나요?

- 국번없이 125로 신고(관세청)하시면 됩니다.
- * 대외무역법 검거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 지급

53

라벨갈이로 인한 피해를 없애려면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올해 1월 1일부터는 '원산지표시 위반자 명단 공표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어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향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단속과 위·변조 도용방지시스템 등의 대응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03

나도 장사해서 성공하고 싶은데...

54

서비스가 좋고 품질이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해 벤처기업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요?

- 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집중 발굴·육성할 계획입니다.
- * '18. 8월부터 업력 30년 이상 도소매, 음식업 업체 대상으로 혁신성 평가를 통해 선정 중('18.12,81개), '22년까지 총 1천여 개 수준으로 관리하고 성공모델을 확산
- ** 제품·서비스, 마케팅, 전문성, 혁신 경영을 통해 지속 발전을 추구하는 소상공인
- 혁신형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금리우대, O2O 플랫폼 연계 마케팅, 홈쇼핑 입점 및 집중 컨설팅 지원
- 혁신형 소상공인이 고용한 청년에 대한 '청년내일채용공제'* 및 사업주에 대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검토('19.상)
- * 고용안정성(업력, 고용유지율 등)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기업 선정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55

음식점을 30년째 운영 중입니다. '백년가게'라는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 도소매·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백년가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인증 현판제공, 신문·방송 및 민간 O2O 플랫폼 연계 홍보, 정책자금 우대(0.4%p) 지원
-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상시(1~11월)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100year@semas.or.kr) 접수
- * 선정방법 : 서류검토(지역센터) → 현장평가 → 지역평가위원회 개최 (4, 6, 8, 10, 12월)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56

'백년가게'처럼 한 우물만 파 왔던 소상공인을 인정해주는 정책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야는 지원 안하나요?

- **명문소공인**(장인정신을 지닌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반 소공인) 등 혁신적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할 예정입니다.('19.상~)
- (지원내용) 인증 현판제공, 신문·방송 연계 홍보, 정책자금 금리우대 (0.4%p), 정책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판로 개척 우선 지원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57 소공인이 많이 모여있는 집적지가 전국에 많을 텐데, 이들 집적지 내 소공인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기관은 없나요?

· 소공인 집적지 내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공인에 대한 교육·상담, 컨설팅, 자율사업 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9년 1월 현재, 11개 시·도에 34곳(13개 업종) 운영 중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58 소공인 집적지에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공동장비실, 공동작업장 같은 공용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 소공인 집적지 특성에 맞는 공동전시·판매장, 공동장비실 같은 공동기반시설을 부산, 강원 등 6개 시·도에서 16곳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19년에 5곳을 선정하고, 이후에도 매년 5곳 내외를 선정·지원할 계획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59 공동 활용시설 외에도 제품개발부터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 '19년에 스마트제조 장비를 포함하여, 소공인의 제품개발, 공동 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19년 복합지원센터 시범 구축(2곳) 후, '22년까지 총 10개 내외로 확대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60 요즘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에 입주공간 제공도 계획하고 있나요?

· '19년에 추진하는 복합지원센터(2곳)에 소공인 전용 입주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61 집적지 이외의 개별 소공인에게 제품이나 기술 경쟁력 향상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제도가 있나요?

·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인프라 구축 외에 개별 소공인 전용 정책자금('19년 4,500억원), 판로개척, 제품·기술가치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19년 124억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62 이와 같은 정부지원도 일부 제조업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개선이 되었나요?

· '18년에 소공인법을 개정하여 소공인 특화사업 지원대상을 전체 제조업 소공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그간 제외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담배,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의약품 물질·의약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63

소상공인 혼자서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힘에 부친 상황이에요. 소상공인들 간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사업, 판로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 * (공동사업) 공동브랜드, 마케팅,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등 지원 (2~5억원 한도)
 - (판로사업) 온라인 판로(V-커머스, 소셜커머스, 광고 등), 지역판매전, 수출교육 등
- 소상공인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 (조합원 20인 이상인 협동조합 육성 : '18년, 30개 → '22년, 150개)
- * 정책지원 대상 확대(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 제한을 완화 : 60~80% 이상 → 50% 이상), 협동조합 간 협력, 협업교육 지원 등 규모화 기반 마련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64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절차) 5인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정관작성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설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 설립신고서, 정관사본, 창립총회 공고문 및 의사록,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등
- (지원사업) 협업인큐베이팅을 통해 조합이론, 정관작성, 비즈니스 모델 수립, 조합원 구성 등 협동조합 설립준비 단계부터 설립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역에 각 1곳씩 협업아카데미 지정·운영 중('19년 전국 10개 내외로 확대)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65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 일반적인 대출을 받기는 어렵는데, 별도의 **지원자금**은 없나요?

-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협동조합 전용 평가모델을 도입하여 지원 자금을 운영 중이며, 조합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합니다.(운전 자금 2억원 포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을 신청하면, 공단이 사업성 평가, 대출한도 산정을 거쳐 자금 지원
- * 신청서류 : 대출신청서, 대표자 실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업종·상시근로자수·사업장 확인서류, 세금납부·매출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협동조합 관련 서류 등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66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좋지만, 무엇보다 장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정부에서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지요?

- 자영업 ·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2조원*으로 대폭 확대('18, 0.37조원 → '19, 2조원)하고, 법적근거 마련**
- * '19년 한시적으로 발행액의 4% 지원 (특별교부세 + 국비)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제정안」('18.8) 계류 중
- '22년까지 **온누리상품권** 총 10조원 규모 발행(연 2조원 이상)
- * 온누리상품권 공공기관 권장구매 확대(경상경비의 1.0→1.5%) 및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 상향 조정(현행 30→40%)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67

정부 · 공공기관 등의 구내식당 운영만 좀 줄여도 장사가 훨씬 잘될 것 같은데, 정부기관부터 술수수범할 의향은 없나요?

- 정부청사 · 지자체의 **구내식당 의무휴무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 미시행 구내식당(정부청사 · 지자체 70여 개 소) 의무휴업 확대 및 기 시행 중인 청사 월별 휴업일수 확대(월 1회→2회 이상)
- 이와 함께,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고('18년 실적 평가부터), 대기업에도 권고와 협조를 요청(동반성장위원회)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68

손님이 몰리는 **식사시간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돌아가는 손님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나요?**

- 상권활성화를 위해 식사 시간, 야간 등에 한시적 주 · 정차 가능 지역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대하고 옥외영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모범사례 : 주정차 단속 유예(은평구 등), 옥외영업 허용(을지로, 청계천 등)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69

홈쇼핑에 나가고 싶어도 영세 자영업자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나요?

- 공영 홈쇼핑에 '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를 신설하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1인 크리에이터가 1인 방송을 하며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1인 홈쇼핑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19상)
- * 공영홈쇼핑 등에 (가칭)'1인 크리에이터 랩'을 운영하여 콘텐츠 제작 등 교육 제공, 세트장 및 장비 등 대어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70

중소기업은 해외진출 지원제도가 많은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제도가 있나요?

- 쿠팡, 카페24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여 상품 콘텐츠 번역, 글로벌 소핑몰 입점, 통관·물류 등 온라인수출 실행을 지원하겠습니다.('19. 300개사)
- 해외 온라인 소핑몰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현지 인플루언서(유튜버 등) 섭외, 홍보영상 제작·배포, SNS 홍보 지원
- 자영업 단체·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 준비,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계약 체결 등을 일괄 지원하는 '자영업 수출컨소시엄'사업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19. 5개)
- 유망 프랜차이즈 수출상담회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연 150개사)
- * 성공사례 : (떡담) '65년 창업 → 국내 가맹점 47개로 성장 → '13년 미국 수출 10만불 돌파 및 떡담 뉴저지점 론칭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71

소규모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필수적인 준비사항이나 상권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창업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 상인정신, 실패에 따르는 책임 등 창업 성공·실패 사례를 방송 및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소상공인방송)
- * 세무서 사업자등록시, 음식업 위생교육시 등 창업 과정에서 시청 권고 및 교육자료로 활용
- 상권정보시스템 활용을 필수화* 및 고도화**하고, '자영업 종합 포털'을 신설하여 업종·지역·부처별 정보가 일괄 조회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창업지원 사업 참여시 상권정보시스템 내 '창업 자가진단' 이용결과 제출 의무화
- ** 상권별 환경(거주 인구, 소득·소비) 및 경영현황(매뉴, 가격) 등 분석, 영업전략 제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72

소상공인들은 창업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성공적인 창업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나요?

- (트렌드창업프로그램) 창업 전에 상권·아이템 분석, 업종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 예비(초기)창업자 대상 교육비(90%, 1인당 50만원 한도)를 지원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공고('19. 3월) 후 수시접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과밀업종이 아닌 틈새시장 창업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 * 창업교육(1,5개월)-점포체험(4개월)-사업화(2천만원 한도)를 단계별로 패키지 지원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생활 속 우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과 성공불용자(2천만원 한도, 성실실패 시 상환의무 면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 홈페이지(<http://idea.sbiz.or.kr>, 아이디어톡톡)를 통한 온라인 신청 ('19.2월~)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73

창업 전에는 교육이나 컨설팅이 있는 것 같던데 창업 이후에도 전문가로부터 계속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 분야별 전문가 580여 명을 확보하여 마케팅, 경영진단, 법률, 세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 1회당(4시간 이상/일, 4일) 최대 1백만원(자부담조건시 10만원, 10%) 지원

-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경영위기를 진단·분석하고 연계 지원하는 '역량 점프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신제품 개발, 브랜드 개발, 매장환경 개선 등 최대 4백만원 한도 지원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74

사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하려고 해도 물어볼 곳도 없고, 도움 받을 데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물어보고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개 지원센터를 통해 폐업신고(행정·세무·금융 등), 사업정리(철거·원상복구)* 등 컨설팅 및 재기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실행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19년에는 지원확대

* ('18) 500개사 최대 100만원 → ('19) 2,000개사 최대 200만원

- 향후,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하여, 폐업 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예정('19.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75

폐업하고 나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어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요?

- 폐업 자영업자의 심리 치료와 자신감 회복을 위해 '힐링캠프'*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18, 60명 → '19, 200명)

* 프로그램(5일 과정) : 힐링 프로그램(명상, 상담, 성공사례 소개, 레크레이션 등), 취업 프로그램(유망업종 탐색, 자기소개서 작성 등)

* (지원인원) 과정당 20명, (지원시기) 4월~연중 지원(총 10회 운영)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76

폐업 후 다시 시작하려 해도, **체납액** 때문에 대출도 못 받고 정부 지원사업 신청도 못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에 소액(3천만원 이하) 국세 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19년) 하고 있습니다.

* '17.12.31일 이전 폐업하고, '18년 중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 국세청 126

77

이번 사업을 정리하고, 더 유망한 업종으로 **새출발**하고 싶은데 **관련 지원제도가 있을까요?**

•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비과밀 업종으로 **재창업**할 수 있도록 재창업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을 확대합니다.('18, 3,600명 → '19, 6,000명)

* 과정당 60시간 이내(경영분야 e-러닝교육 10시간, 업종전문교육 50시간)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78

저는 아무래도 자영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니 생활이나 취업준비가 막막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 원활한 전직, 재취업을 위해 재기교육을 확대('18, 8,950명→'19, 20,000명) 하고, 전직장려수당*을 인상('18, 75만원→'19, 100만원) 하였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교육을 받고,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 분할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자영업자 참여요건을 완화(연매출 0.8억원→1.5억원 이하)하여 취업준비 기회를 확대('18, 0.8→'19, 1.5만명)하였습니다.

* 단계별(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중위소득 50% 이하)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 고용노동부 1350

개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상권 전체를 활성화해서 손님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하여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19, 13곳→’22년까지 30곳 육성)
- * 전국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 ** ’18년 3곳(대구 칠성시장 주변 상권, 강진 중앙로 상점이 일원, 수원 역전 상권)을 지원 중으로, 구역당 5년간 80억원 지원(지자체 매칭)
- 지자체 · 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경관을 조성하고, 쇼핑 · 커뮤니티 · 청년창업 · 힐링(지역문화 · 예술)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성
- * 상권 자체의 핵심 역량(음식, 의료, 패션 등) 및 지역 특화산업 등과 연계
- 복합청년몰, 특성화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기존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 촉진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전통시장은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찾아오기 어렵다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이 더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17, 72%)을 100% 수준*으로 높이고 (~’22), 주요 상권에도 공영주차장 보급 확대를 위해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 주택가로 둘러싸인 시장 등 주차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전 시장에 설치(’19, 1,424억원)
- ** 군특회계 주차환경개선사업 활용(’19년 전국 56곳 공영주차장 건립, 645억원) → 지자체가 수요가 많은 상점가 등에 예산을 우선 반영토록 지침 개정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1599-0001

우리 시장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부지가 마땅치 않는데 어떡하죠?

- 주차장 설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공원, 도로 및 건물 지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부지 부족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 ’18년 지하주차장 건립 : 부천, 구리, 군포 등 3곳
- 주택가로 둘러싸여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공공 · 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고객들이 주차 불편이 없도록 지원(’19년 12억원 지원 예정)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82

전통시장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등 고객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데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19, 1,237억원)
*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고객쉼터, 진입도로 등 고객편의 및 공동이용 시설, 소방시설 및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
- 전통시장·상점가에 지원시설(소상공인지원센터) 배치 및 공용 시설(공동창고, 택배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22 40곳)을 설치하겠습니다.
* 노래교실, 외국어교육, 공방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연 30곳, ~'22, 120곳)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83

영업종료 후에는 점포가 무방비 상태인데 혹시나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죠?

- 영업종료 후에도 화재발생 여부를 감지하여 소방서 및 상인에게 자동 통보하는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조건) 점포당 총사업비 80만원 한도(국비 70% 지원, 지방비 및 민간 30%)
- (지원내용)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소방서에 자동 통보하는 화재속보장치 등 지원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84

화재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피해 상인의 복구 지원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 중이며,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6천만원까지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
- (가입기간) 1~3년 선택,
- (가입한도) 최대 6천만원(건물 3천, 동산 3천)
- (가입금액) 66천원~304.6천원(1년 기준, 2천~6천만원 피해 보상 설정 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85

전통시장 개별 점포뿐만 아니라 아케이드, 냉난방시설 등 공동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전기요금으로 인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도·소매 업종 개별 점포*에 월 5.9%의 전기료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19년)
* 대형 종합소매업,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제한업종 등은 제외
- 전통시장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공동시설 전기요금 절감으로 상인부담을 완화하고, 수익 창출 모델로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19년 태양광 시설 설치 예정 현황 : 도마르시장 등 16곳, 124억원(국비 74억원)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전통시장 경영혁신을 위한 **지원사업**이 너무 복잡한데,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되는 거죠?

- '19년부터 기존 시장매니저,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시장활성화 컨설팅, 배송서비스 등의 개별사업을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과 통·폐합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부여되는 바우처 한도 범위(최대 6천만원) 내에서 원하는 사업과 수행기관을 선택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전통시장 **청년몰**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떤 지원 정책이 있나요?

- 전통시장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영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몰 지원 강화
 - 입지제한 완화(전통시장 → 오픈된 상점가, 상점가 조성 예정지 등)
 - * 폐공장, 농협창고, 폐극장 등을 활용한 테마형 청년몰 상점가 조성 지원
 - 신개념 청년몰 구축(기업형 · 조합형 공동창업, 창업전문기업 연계형 등)
 - * 기업형, 조합형 공동창업(공동제조, 공동판매), 창업전문기업 연계 창업보육센터형 등
 - 청년몰 사후관리 강화(청년몰 활성화 · 확장 지원, 청년몰-대학협력 등)
-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 기업승계, 도약지원, 백중원식 컨설팅 등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지원
 - 청년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율적 상생협력 지원
 - * 청년상인 전국 네트워크 출범('19. 5월 중) 및 청년상인 전국대회 정례 개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04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말 못 할 애로...

88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하다 적발되면 처벌받는 건가요?

• 청소년의 강박,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에 의해 주류를 제공한 선의의 판매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 하였습니다.('19.6월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

89 최저임금과 같이 어려운 **노동관계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할까 사람 고용하기가 꺼려지는데 도움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를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지도 후 조치)하고 노동관계법 자율준수·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 '19년 교육 5,000명, 컨설팅 11,500개소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90 **카드매출 대금 정산기간** 때문에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영세·중소가맹점의 현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카드매출 대금 정산 기간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카드승인일의 익일) 기준 D+2일에서 D+1일로 단축하였습니다.('18.9월~)

☎ 금융위원회 02-2100-2500

91 **종량제봉투**는 팔아도 남는 것이 없고 손만 많이 가는데 수익을 좀 더 보강해 줄 방안은 없나요?

• 실태조사(환경부) 후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수료율 조정*을 지자체에 권고하겠습니다. ('19.1월)
* 현행 3~7%→최대 9%

☎ 환경부 1577-8866

92 **청탁금지법** 때문에 매출이 줄었는데 개선 방안이 있나요?

•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농수산물 선물과 합산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다만, 환함과 합산할 경우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110

93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피해 구제책이 있나요?

•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을 모든 외식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18.2월)
* 위약금 기준 가이드라인 :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에 취소 : 위약금 없음(예약보증금 환급)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후에 취소 :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수취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94 미용 관련 수요는 많아지는데, 제도가 미흡해서 업계가 발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나요?

- '(가칭)뷰티산업 진흥·육성법' 제정을 추진하여 미용업의 육성·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의 지정·규격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129

95 건물 벽면을 이용한 간판 설치가 3층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광고에 제약이 받는 상황이에요. 설치 제한을 좀 더 풀어줄 수는 없나요?

- 정부는 광고물 제작·설치 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층수 제한을 규정할 수 있도록 5층까지 간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시·도 표준조례안을 변경하여 시달하였습니다.('18.12월)

☎ 행정안전부 02-2100-3399

96 PC방을 운영하다 장사가 안돼서 폐업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폐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 PC방, 노래연습장의 경우,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작성 등을 통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19.상)

☎ 문화체육관광부 043-203-2000

97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는데 잔일이 많을수록 영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구 교환이나 타이어펍크 수리처럼 단순한 작업의 경우에도 견적서와 명세서 발급을 꼭 해야 하나요?

- 단순 소모품 교환 등의 경정비의 경우 소비자가 부품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액 단순 작업의 경우 견적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19.상)

☎ 국토교통부 1599-0001

98 여행업 관련 자본금 기준 때문에 창업이 어려운데,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수 없나요?

- 여행업 관련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가칭)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겠습니다.
- * 일반여행업(2→1억원), 국외여행업(6→3천만원), 국내여행업(3→1.5천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043-203-2000

99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은 있지만, 자영업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는 부족한 것 아닌가요?

-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육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19)
- * 주요내용(안) : 개념 및 정의, 종합계획 수립, 자영업 정책 협의회 구성·운영, 소상공인·자영업 지원·보호 등 시책의 개괄적 내용, 실태조사 등 통계 관련 규정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정부에서 그간 자영업자를 위해 많은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그간 발표한 대책 중 계량화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매출액·업종 등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자영업 대책 혜택 계산기'를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구축 중입니다. (*19.2월 서비스 개시)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zero Pay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및 소비자 이용 안내

zero Pay 가맹점 신청 안내

제로페이

zero Pay 소비자 이용 안내

제로페이

신청 대상

-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도박, 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적용 수수료율

| | | |
|----------|-------------------|----------------|
| 소상공인 가맹점 | 연매출액 | 8억원 이하 : 0% |
| | | 8억~12억원 : 0.3% |
| | | 12억원 초과 : 0.5% |
| 일반 가맹점 |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 | |

*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출액의 0.8~2.3%를 카드수수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제로페이 홈페이지(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



*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입금계좌 사본 업로드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지방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된 가맹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입금계좌 사본 포함하여 제출

* (가맹점 앱 설치) 스마트폰(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앱' 검색 후 설치

소비자 앱 설치

- 기존 은행 및 간편 결제사 앱*을 이용하거나 신규 설치 → 이용동의 → 본인인증 → 비밀번호·결제계좌 등록 → 완료



* 참여 사업자는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간편 결제를 이용하는 방법

<가맹점 비치 QR 결제 방식>

-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결제 앱을 실행해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한 후, 금액 및 비밀번호 입력하여 결제



<소비자 제시 QR 결제 방식>

-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결제 앱을 실행해 QR코드(바코드)를 생성한 후 제시하면 매장의 POS 등을 이용하여 결제



* 일부 가맹점만 적용, 확대 예정

MEMO

MEMO

MEMO
